

2011. 12. 19 제277호

특 집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1. 12. 19 제277호 특집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복지 제고

1. 시민의 가계재정 관리를 위해 무료로 재정상담 시행 (뉴욕)
2.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빈곤완화 채권' 발행 (영국)
3. 겨울철 '에너지 빈곤' 현황을 분석한 후 향후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런던)
(토막기사) 건물의 열 보존성능 강화 및 단열 공사 지원 (영국 데번주)
4.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소액대출 서비스 실시 (파리)
5. 의료·개호(介護) 연계형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실시 (도쿄)
6. '고령자 거주안정 확보계획' 수립·운영 (도쿄)
7.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영화관 및 디지털도서관 개관 (중국 상하이市)
(토막기사) 아동수당을 아동의 연령 및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일본)
(토막기사) 혼자·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조부모에게 매월 양육보조금 지급 (워싱턴 D.C.)
(토막기사) 슬럼가에 사는 빈민에게 주택 무상 제공 추진 (인도 뭄바이市)
(토막기사) 여성의 저임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 및 급여평등 운동 추진 (독일)
(토막기사) '복지서비스 제3자 평가제도' 운영 (도쿄)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복지 제고

1. 시민의 가계재정 관리를 위해 무료로 재정상담 시행 (뉴욕)

- 뉴욕시는 시민들이 어렵게 벌어들인 가계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대일로 재정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시 무료 재정관리 센터(Free Financial Empowerment Centers)에서는 계좌관리, 재정 운영 팁, 직업교육 및 대학원 학비 조달, 직업훈련의 종류와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고 있음.
 - 한국과 은행시스템이 다른 미국에서는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유지하는데 비용(계좌 최소 예치금, 계좌 이용에 대한 월 수수료, 현금인출카드 발급 및 사용료 등)이 많이 들어 시민들이 은행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 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도시정부에서 계좌를 개설해 관리해주는 계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질병, 사고, 실업 등에 대비해 공과금 납입, 최소 예치금 관리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재정상담은 주로 전화로 이루어지지만 5개 區마다 설치된 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음. 현재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의 3개 언어로 상담이 이루어짐. 센터마다 상담 및 교육 내용에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재정상담을 일대일로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시민이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음.
 - 주요 교육 및 상담 내용은 컴퓨터 및 영어 기본강좌, 개인파산, 신용관리, 대출, 세금, 금융 일반 및 가계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임.

- 또한 市 소비자국은 10개 가계재정 관리 팁을 발표해 금융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시민도 가계재정을 탄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① 市에서 운영하는 ‘SafeStart Account’ 계좌를 이용할 것, ② 지출내역을 관리할 것, ③ 대출금 상환방법 및 내용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 ④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저축할 것, ⑤ 자신의 재정상황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혜택(생활보조금, 식품과 교환할 수 있는 Food Stamp, 공과금 할인혜택 등)을 잘 활용할 것, ⑥ 가계 재정운영과 관련한 금융서비스 중에 지나치게 좋은 내용의 상품은 주의할 것, ⑦ 개인정보를 잘 관리할 것, ⑧ 대출금 상환 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신고할 것, ⑨ 잘못된 소비자 서비스를 받을 경우 신고할 것, ⑩ 무료 재정상담 서비스를 활용할 것

(<http://home2.nyc.gov/html/ofe/html/find/find.shtml>)

(www.nyc.gov/html/ofe/html/poverty/pym_top_ten.shtml)

2.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빈곤완화 채권’ 발행 (영국)

- 영국 정부는 런던市的 웨스트민스터, 해머스미스, 풀럼區와 버밍햄市, 레스터市 등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빈곤완화 채권’(Social Impact Bonds)을 발행함. 채권 발행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을 지원할 계획임.
- 빈곤완화 채권은 런던의 3개 자치구와 중부지역의 2개 도시에서 총 4000만 파운드(약 7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경기 침체로 인한 복지예산 감축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는 빈

곤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의 일환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자선사업가, 자선 복지 기금 단체 등을 방문해 채권 발행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음. 경기 악화로 인해 빈곤층 청소년들이 교육의 기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저소득층 지원 사업은 청소년 범죄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됨.

- 채권이 복지예산으로 투입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① 우선 지방자치단체나 교도소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관할 구역 내 빈곤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기획한 뒤 소요예산에 맞춰 채권을 발행함. ② 민간기업, 자선단체 등은 특정 사업별로 발행된 빈곤완화 채권을 구입함.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채권 판매 수입을 활용해 계획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목표에 맞게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불함. 이자는 일종의 사업 성공 축하금으로 목표 달성률에 따라 이자율이 2~13% 정도로 정해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 중앙정부는 사업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교도소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음. 현재 극빈층 가정을 위해 확보한 중앙정부 예산은 연간 40억 파운드(약 7조 1800억 원)임. 2010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11년 5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함.

- 보고서에서는 채권 발행으로 복지예산 편성 부담은 줄이면서 저소득층 복지는 유지·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 이에 반해 채권 구입자, 사업 주체, 중앙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 간에 대화와 소통이 부족했고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된 측면도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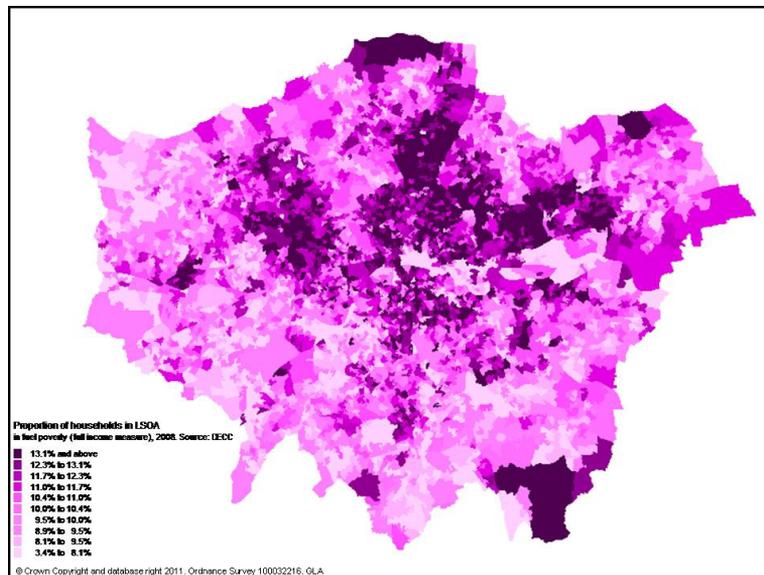
(www.bbc.co.uk/news/uk-politics-14663564)

3. 겨울철 ‘에너지 빈곤’ 현황을 분석한 후 향후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런던)

- 런던시는 2009년 기준 ‘연료 빈곤’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대책을 시나리오별로 정리해 ‘Current Issues Note 34’라는 보고서를 출간함.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2009년 현재 런던에서 가구수입의 10% 이상을 연료비로 쓰는 연료 빈곤(에너지 빈곤) 가구 수는 전체의 18.6%(56만 28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2008년의 15.6%보다 증가한 수치임.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동절기 기후 악화와 연료비 상승, 경기 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가처분소득은 줄고 연료비 지출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 런던에서 기존에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가구가 전체 연료 빈곤 가구의 82%를 차지해 겨울철에 사회·경제적 약자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료 빈곤층도 극빈층과 빈곤층으로 나눌 수 있음. 연료 극빈 가구는 가구수입의 20% 이상을 지출해야만 실내 난방을 최소 18°C로 유지할 수 있는 가구를 말하며, 런던에서는 총 12만 6400가구가 이에 해당됨.
 - 에너지 빈곤 문제는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건물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거지의 실내 면적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비율을 조사해 효율이 가장 높은 A등급부터 가장 낮은 G등급까지 나누면 연료 빈곤 가구가 G등급의 59.4%를 차지함.

- 지역별로 연료 빈곤 문제를 살펴보면 가장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뉴엄, 해크니, 크로이던 지역임(지도에서 진하게 표시된 곳임). 런던은 고소득자가 많은 도시로 가구소득의 5% 미만을 연료 소비에 쓰는 가구 비율도 영국에서 가장 높음.



【2008년 런던市 지역별 연료 빈곤 조사 결과
(진할수록 빈곤도가 높음)】

- 市는 연료비 변동을 나타내는 소비자 물가지수, 가구 수 변화 등을 바탕으로 4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2013년의 연료 빈곤 특성을 예측함. 연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극빈층이나 빈곤층의 가구소득은 적어 2013년에도 전체 가구의 약 19~24%가 연료 빈곤 문제를 겪을 것으로 전망함. 따라서 市도 계층 간 소득 격차, 계절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빈곤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설 계획임.

- ‘에너지 빈곤’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는 2001년 ‘가정 난방과 에너지 보존법’(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 제정 후 처음으로 겨울철 연료 빈곤 대책(Fuel Poverty Strategy)을 내놓은 바 있음.

- 이 대책에 따르면 2010년까지 극빈층 연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2016년까지는 잉글랜드 내에서 연료 빈곤을 겪는 가구가 없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움.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 의지와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연료 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cin34.pdf)

(www.decc.gov.uk/media/viewfile.ashx?filetype=4&filepath=11/funding-support/fuel-poverty/3226-fuel-poverty-review-interim-report.pdf&minwidth=true)

건물의 열 보존성능 강화 및 단열 공사 지원 (영국 데번州)

- 영국에서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날 수 있도록 건물의 열 보존성능 강화공사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음. 남서부에 위치한 데번州와 런던市가 대표적인 경우임. 먼저 데번州는 ‘아늑한 데번’(Cosy Devon) 사업을 통해 에너지 공급업체 E.ON社, 기초자치단체, 에너지 소비 저감활동을 펼쳐온 민간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건물의 열 유출을 막기 위한 단열공사를 지원함.
- 저소득층인 경우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무료이며,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도 저렴하게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연료비 부담이 커서 계절적인 빈곤층이 되는 연료 빈곤(Fuel Poverty) 문제가 북데번에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곳을 이번 사업의 주 대상지로 삼음. 북데번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는 무료 전화상담 창구를 개설해 시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홈페이지도 운영 중임.

- 런던의 경우 市 전역에서 대대적인 건물 단열 강화 등 친환경 보수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음. 대규모 임대사업자, 부동산 대량 보유 기업, 일반주택 소유자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됨.

- 실질적인 개·보수 공사비 지원은 Green Deal 사업을 통해 이루어짐. 일반 기업이 보유 부동산을 친환경 건물로 개조할 경우 보수에 들어간 비용을 전기요금 감면 등의 방법으로 보전해주는 사업임. 선 개·보수, 후 지원 방식인 이 사업은 2012년 가을부터 시작될 예정임. 단열 보수공사로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 비용은 연간 10억 파운드(약 1조 7950억 원)에 달하며, 시민의 삶의 질 제고, 일자리 창출 등의 부가적인 사회적 혜택도 늘어남.

(www.northdevon.gov.uk/news-article.htm?newsid=53248)

(www.cosydevon.co.uk/)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E2%80%98retrofit-save-billions-and-get-young-londoners-work-mayor-tells-london)

4.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소액대출 서비스 실시 (파리)

- 파리市 크레디트(Crédit Municipal de Paris)는 市의 요청으로 기존 은행의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으나 상환능력이 있는 파리 시민과 일드 프랑스 주민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소액대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음. 대상자는 이들 지역 주민의 약 10%에 달함.

- 소액대출금은 교통 관련(운전면허증 취득, 차량 구입 등), 구직 및 직업훈련(간호 보조, 미용, 중장비 운전 등), 필수 가전제품 및 가구(냉장고, 식탁, 침대 등), 건강 관련(치과 진료, 안경 및 보청기 구입 등),

경조사(장례식, 결혼 등)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음. 대출금은 채무를 청산하거나 창업을 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음.

- 대출금은 적게는 300유로(약 45만 원), 많게는 3000유로(약 453만 원)까지 가능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5000유로(약 755만 원)까지 가능함. 대출기간은 최소 6개월, 최대 36개월이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6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기간은 대출 신청자의 재산 상태와 대출 성격에 따라 달라짐.

- 이자는 연 4%로 대출신청 비용과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고 담보도 필요 없음. 거주지에 따라 이자를 돌려주는 비율이 달라짐. 센생드니, 에손, 셴에마른 주민들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이자의 절반을 돌려받고, 파리 시민이나 발드마른 주민들은 이자를 전부 돌려받음.

- 예를 들어 2500유로(약 378만 원)를 36개월 동안 4%의 이자로 소액 대출을 받으면 매월 73.81유로(약 11만 원)를 상환해야 하고 총 상환금액은 2657.10유로(약 400만 원)가 됨. 사망이나 실업 등에 대비해 최대 3.71유로(약 5600원)의 임의 보험료가 월 상환금액에 추가됨.

- 대출 신청 방식은 다음과 같음.

- ① 파리市 크레디트나 파트너협회와의 상담을 통해 대출 신청의 필요성, 직업 여부 및 재정상황 등에 대해 논의함. ② 상담 후 대출을 원하는 주민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 대출위원회에 제출함. ③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 대출계약서를 작성함. ④ 계약서 작성 몇 주 후에 대출금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됨. 예를 들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대출을 신청했다면 해당 운전

면허학원으로 대출금이 지급됨.

(www.paris.fr/accueil/Portal.lut?page_id=9651&document_type_id=4&document_id=91019&portlet_id=23756&multileveldocument_sheet_id=17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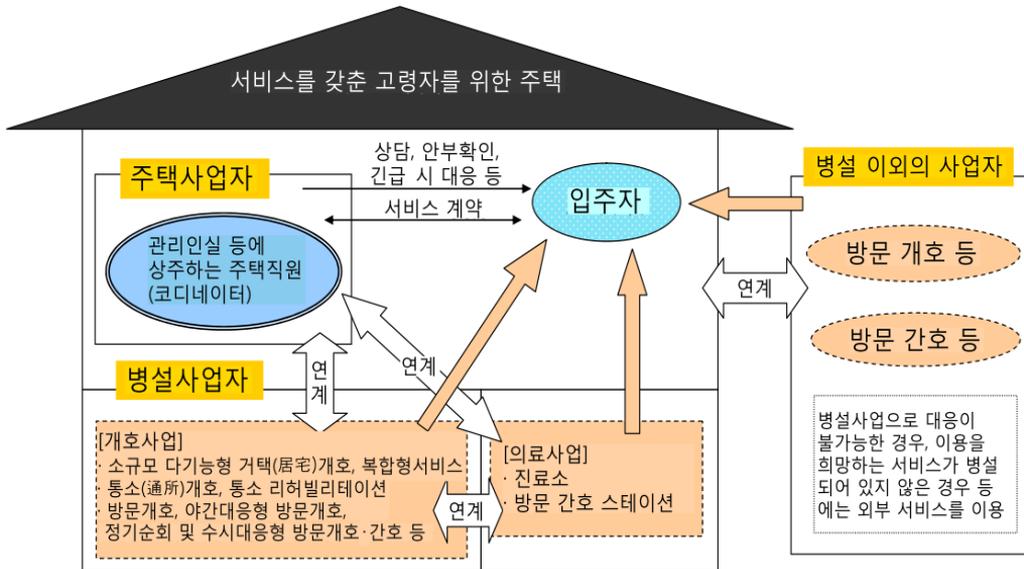
(www.microcredit-municipal.fr/)

5. 의료·개호(介護) 연계형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실시 (도쿄)

- 도쿄都 복지보건국 고령사회대책부는 고령자가 진료와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개호(介護) 연계형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2010년 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함. 생활지원 서비스 공간을 갖춘 고령자주택과 함께 진료 및 간호시설을 모두 갖춘 사업소로 범위를 정함.

- 사업유형별 지원금 상한은 다음과 같으며, 국토교통성의 보조를 받는 경우 都에서는 그 차액만을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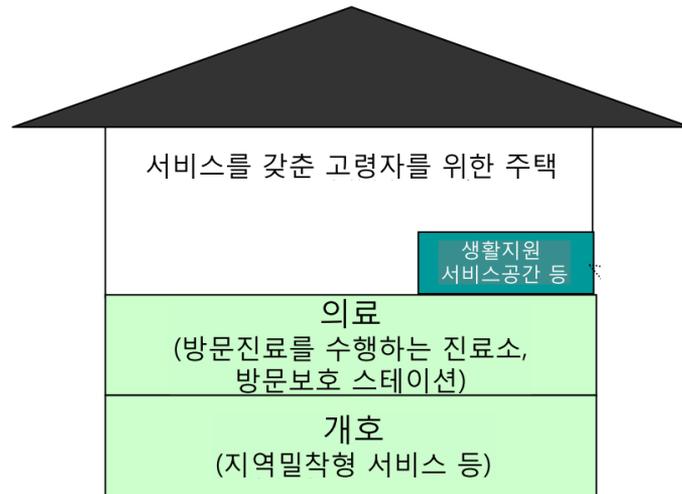
- 생활지원 서비스 공간 설치: 지원금 상한은 1500만 엔(약 2억 2300만 원)임.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내에 긴급대응, 안부확인, 생활상담 등의 기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이는 관리인이 상주하고 긴급통보 장치를 설치했거나 긴급대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과 생활상담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함. 선택적으로 거실과 식당 이외에 입주자와 지역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입주자에 대한 개호 정도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욕실 공간이 마련되어야 함.



【의료·개호 연계형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의 개념】

- 진료소 또는 방문간호 스테이션: 지원금 상한은 400만 엔(약 6000만 원)임.
- 방문개호 또는 야간 대응형 방문개호: 지원금 상한은 500만 엔(약 7400만 원)임. 방문개호는 홈 헬퍼가 가정을 방문해 식사와 배설, 세탁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야간 대응형 방문개호는 홈 헬퍼가 야간에 정기적으로 가정을 순회하거나 긴급연락을 받은 가정을 방문해 개호와 간호를 실시하는 사업임.
- 통소(通所) 개호 및 치매 대응형 통소 개호, 통소 리허빌리테이션(Rehabilitation): 지원금 상한은 1000만 엔(약 1억 4800만 원)임. 통소 개호란 시설에 나가 식사, 목욕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회복을 위한 훈련과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는 사업임. 치매 대응형 통소 개호는 시설에 나가 치매 고령자가 가능한 한 자립할 수 있도록 개호와 기능 회복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임. 통소 리허빌리테이션이란 일명 데이케어 서비스로, 의료기관과 노인

보건시설 등에 나가 심신기능의 유지·회복과 일상생활의 자립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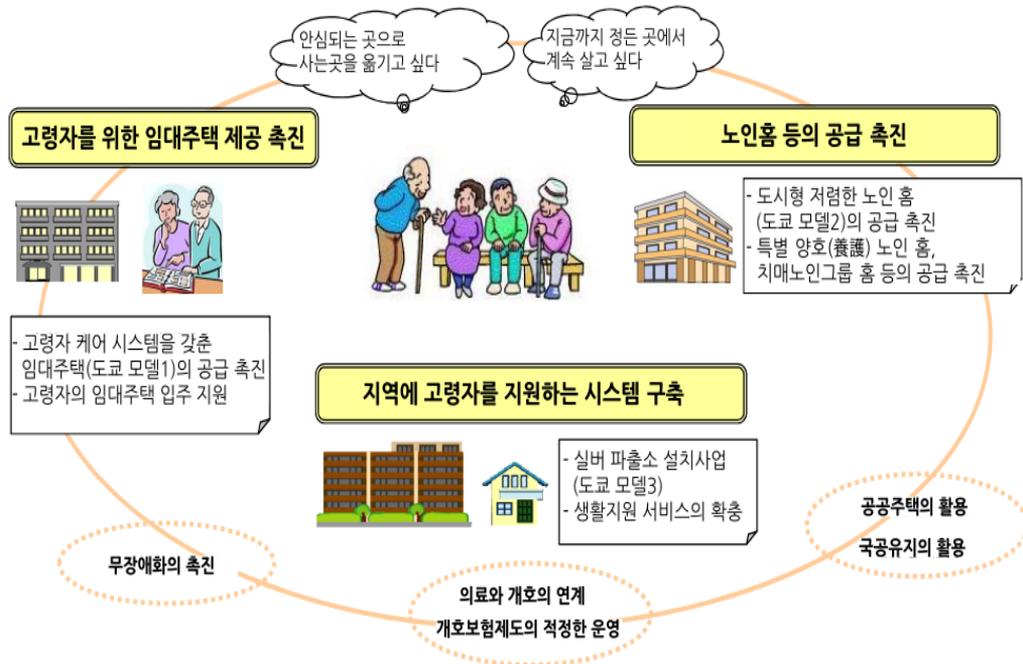
【지원 대상 시설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 공간】

-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居宅) 개호 및 단기입주 생활개호: 지원금 상한은 1500만 엔(약 2억 2300만 원)임.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란 가까운 지역 사무소에서 주로 통소에 의한 식사와 목욕,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단기입주 생활개호란 특별 양호(養護) 노인 홈 등에 단기 입소해 목욕, 식사 등의 일상생활에 대한 개호와 기능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임.
- 긴급통보·안부확인 장치 설치: 지원금 상한은 900만 엔(약 1억 3400만 원)임.

(東京都 福祉保健局 高齢社会対策部, 2011. 8, 東京都医療·介護連携型高齢者専用賃貸住宅モデル事業の概要)

6. '고령자 거주안정 확보계획' 수립·운영 (도쿄)

- 도쿄都 도시정비국과 복지보건국은 공동으로 2010년 9월 9일 '고령자 거주안정 확보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자의 생활기반이 되는 주택이나 양로원 등 정주시설과 관련해 고령자가 원하는 거주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살아온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환경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을 연계한 계획임.
- 이 계획은 기존의 '都 주택 마스터플랜', '都 고령자 보건복지계획', 비전계획인 '10년 후 도쿄계획'의 실행프로그램 등의 상위계획과 '고령자의 거주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10년부터 약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해 수립됨.
 - 都는 이 계획이 목표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① 고령자 임대주택 및 노인 홈 등의 공급 촉진(고령자 케어 시스템을 갖춘 임대주택, 특별 양호(養護) 노인 홈 및 저렴한 노인 홈 등의 공급 촉진), ② 고령자 입주 지원 서비스의 질 확보(지원 서비스를 갖춘 고령자 주택 보급, 고령자 임대주택 등록 및 열람제도 운용 및 보급), ③ 지역에 고령자 지원시스템 구축(지역의 상담지원 체계 정비, 생활 지원 서비스 확충) 등 크게 3대 시책과 각각의 세부시책을 제시하고 있음.
 - 이 계획의 수립을 통해 기존의 고령자 주택 관련 여러 법·제도에 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완화 또는 강화됨. 예를 들어 기존의 건물을 보수·정비해 거실·식당·부엌 등의 공동이용 공간을 마련할 경우 '고령자를 위한 우량 임대주택 면적기준'이 25㎡ 이상은 20㎡로, 18㎡ 이상은 13㎡ 이상으로 완화됨.



【고령자 거주안정 확보계획의 개념】

-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9/20k99100.htm)
-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9/DATA/20k99101.pdf)
-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9/DATA/20k99100.pdf)

7.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영화관 및 디지털도서관 개관 (중국 상하이市)

- 중국 상하이市 무장애(無障礙) 디지털도서관(dlpwd.library.sh.cn)이 2011년 12월 2일 정식 개관됨. 무장애 디지털도서관은 시각·청각장애인 및 노년층이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최근 문을 연 40여 개 무장애 영화관과 함께 장애인 복지를 제고했다는 데 의미가 있음.



【무장애 디지털 도서관 홈페이지】

- 市 도서관에 등록된 장애인 2000여 명이 디지털도서관의 주 이용자가 되며,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책을 보고 강의를 들을 수 있음. 2012년 초에는 상하이에 거주하는 장애인증을 소지한 모든 장애인이 무장애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무장애 디지털도서관에서는 오디오북과 ‘상하이도서관 강좌시리즈’를 서비스하고 있음. 홈페이지에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설치하면 시각장애인은 원하는 서적을 쉽게 찾아 도서 전체나 일부를 골라 들을 수 있음. 청각장애인은 홈페이지에서 강좌내용을 문자화한 서비스를 제공받음. 상하이도서관 강좌시리즈는 620여 개 강좌(총 1000여 시간)로 구성되어 있음. 무장애 디지털도서관은 2012년 초까지 2000여 권의 도서를 보유할 계획임.
-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디자인도 혁신함. 글자크기 확대, 화면의 선명도 제고, 실시간 도우미 연결 지원, 문맹자를 위한 음성서비스 등을 시행함.



【장애인을 배려한 홈페이지 디자인】

- 현재 상하이시는 공공문화 서비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시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교육, 오락, 문화예술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공문화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는 데 힘을 쏟고 있음.
 - 현재 상하이시 장애인은 총 94만 명으로 이 중 15만 8000명이 시각장애인이고, 25만 9000명이 청각장애인임. 무장애 영화관과 디지털도서관은 전체 장애인의 44%가 이용할 수 있게 됨.
 - 문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아 그동안 장애인의 문화예술 권익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 장애인이 밀집해 살고 있지만 장애인 배려 정책이 미흡했던 상하이시의 이번 시도는 장애인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음.
- 한편 중국 정부도 중국 장애인 디지털도서관(dlpwd.nlc.gov.cn), 중국 맹인 디지털도서관(cdli.org.cn) 등을 운영하고 있음.



【중국 장애인 디지털도서관】



【중국 맹인 디지털도서관】

(<http://news.xinmin.cn/rollnews/2011/12/03/12874025.html>)

(<http://city.ifeng.com/cskx/20111203/184658.shtml>)

아동수당을 아동의 연령 및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일본)

- 일본 정부는 2010년 4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득에 관계없이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1만 3000엔(약 19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으나,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북부 대지진 피해 복구 재원이 부족해 2011년 10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제도를 변경함. 이 법은 당초 2011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개정을 통해 2011년 9월 말까지 연장된 바 있는데, 이번에 지급기준을 변경하게 된 것임.
- 2011년 10월 1일부터는 아동의 연령을 3단계로 구분해 수당을 차등 지급함.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금액이 많아지게 됨. 종전과 같이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아동수당 지급기준 변경내역】

아동 연령	2010. 4. 1 ~ 2011. 9. 30	2011. 10. 1 ~ 2012. 3. 31	2012. 4. 1 이후
만 3세 미만	1인당 1만 3000엔 (약 19만 원)	1인당 1만 5000엔(약 22만 원) (증액)	미정 (국회 심의 후 결정)
만 3세 이상 초등학교 졸업 전 중학생		1인당 1만 엔(약 15만 원) (감액) (셋째 이상은 1만 5000엔)	
	1인당 1만 엔 (감액)		

- 지급요건을 살펴보면 ① 자녀가 일본에 살고 있는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고(단 해외 유학은 제외), ② 부모가 이혼협의 중인 경우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며, ③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가 지정한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고, ④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후견인이 있을 경우 후견인에게 지급하며, ⑤ 아동이 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양부모가 양육할 경우 원칙적으로 시설의 설치자나 양부모에게 지급함.
- 2011년 4월 법 개정을 통해 수당 지급기한을 연장하면서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던 것을 지방정부에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됨. 이에 대해 수도권 9개 都·縣·市가 지방정부에 재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재원문제를 둘러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음.

(www.mhlw.go.jp/bunya/kodomo/osirase/100402-1.html)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11/20lbh401.htm)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조부모에게 매월 양육보조금 지급 (워싱턴 D.C.)

- 워싱턴 D.C.는 저소득층 중에서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경우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Grandparents Caregivers Program)을 시행 중임. 市는 기존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 아동 복지에까지 신경 쓰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양육보조금을 지급함.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① 조부모의 보호를 받는 아이의 나이가 18세 이하일 것, ② 아이와 함께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③ 최근 6개월간 아이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았을 것, ④ 연방정부가 정한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될 것, ⑤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임시 지원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을 것, ⑥ 아이와 함께 거주하는 성인이 연방정부 아동 학대자 명단에 없을 것

- 이 프로그램은 예산규모가 정해져 있어 선착순으로 수혜자를 정하며, 한 번 제출한 신청서는 도시정부 지원프로그램의 대기자 리스트에 등록되어 다음 순서를 기다리게 됨. 아이 부모가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혈연관계가 아닌 보호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금은 1일 생활비 기준으로 산정되며, 타 기관에서 생활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금액을 합산해 일정금액만 지원받게 됨. 계좌 입금이 아니라 市에서 발행된 수표가 매월 14일에 지급되며 아동 양육과 관련된 식품 및 교복 구입, 여름캠프 비용, 기타 아동복지 및 교육 등의 용도로만 지출할 수 있음.

(<http://cfsa.dc.gov/DC/CFSA/For+Families/Grandparent+Program>)

슬럼가에 사는 빈민에게 주택 무상 제공 추진 (인도 뭄바이市)

- 인도 뭄바이市는 슬럼가에 살고 있는 모든 빈민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市는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슬럼가에 정착한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고 기준일 이후에 정착한 사람에게는 최대 50%의 건설비만 부담하면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市는 슬럼가 재개발을 위해 1971년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州가 제정한 ‘Maharashtra Slum Act 1971’에 주택 무상 제공에 대한 조항을 추가할 예정임. 마하라슈트라州는 인도 내에서 가장 부유한 州로 꼽히며 뭄바이市가 주도(州都)임.
- 市는 1995년을 기준으로 하는 1안 외에 여러 안을 함께 검토 중임. 기준일을 2000년 1월 1일로 하는 2안, 1995년 이전에 정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전 집주인이 1995년 이전에 정착한 경우에도 혜택을 주는 3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음. 2안을 선택할 경우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25% 증가하고, 3안을 선택할 경우 48% 정도 증가함. 州정부는 법안 개정이 가져올 중요한 정책 변화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함.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city/mumbai/State-plans-to-give-all-city-slum-dwellers-a-house/articleshow/10913861.cms>)

여성의 저임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 및 급여평등 운동 추진 (독일)

- 독일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법정 최저임금제 도입이 추진되는 동시에 여성의 저임금 개선을 위한 급여평등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연방정부는 급여평등을 위해 2008년부터 해마다 Equal Pay Day를 정하고 Equal Pay Day 운동본부를 통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 이 운동의 목적은 여성 저임금의 근원을 밝히고 급여 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불평등 요인을 분석해 여성 저임금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참여도를 높이는 데 있음.
 - Equal Pay Day는 매년 직전년도와 여성과 남성 간 임금 차이를 토대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임금을 도달하기 위해 더 일해야 하는 시간 수를 계산해 정함. 2010년에 여성이 남성보다 84일을 더 일해야 했기 때문에 2011년 들어 84일째가 되는 3월 25일이 Equal Pay Day로 정해짐. 2008년에는 4월 15일, 2010년에는 3월 26일이었음. 연방정부는 2020년까지 여성과 남성 간 임금 차이를 현재의 23%에서 10%로 낮춘다는 계획임.
- 한편 베를린시는 2011년 Equal Pay Day 행사를 계기로 여성의 임금차별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제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도입을 연방의회에 재차 촉구함. 여성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법정 최저임금제의 전면적인 도입이라고 판단한 것임.
 - 독일에서는 최저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저임금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들 저임금 근로자의 2/3가 여성임. 독일 취업여성의 약 70%가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며 이 중에는 시간당 5~6유로(약 7500~9000원)의 덤핑임금을 받는 경우도 많음.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는 지난 수년간 23%대를 유지하고 있음. 정규직 남성은 시간당 평균 19.41유로(약 2만 9000원)를 받지만 정규직 여성은 16.52유로(약 2만 5000원)를 받음. 이러한 임금 차이는 전문직과 간부급에도 나타남. 한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간부급 여성은 같은 직위의 남성에 비해 임금을 15~21% 적게 받음.
 - 연방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간 단체협약 체결이 어려운 산업에 한해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음.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 도입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제 도입 후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의 비용 증가와 이로 인한 고용 감소 및 실업 증가를 우려하기 때문임.

(www.berlin.de/sen/wtf/presse/archiv/20110324.1330.337123.html)

(www.berlin.de/rubrik/hauptstadt/politik-aktuell/090213.html)

(www.equalpayday.de/)

‘복지서비스 제3자 평가제도’ 운영 (도쿄)

- 도쿄都는 ‘복지서비스 제3자 평가제도’(The Welfare Service Third-Party Evaluation)를 운영하고 있음. 이 제도는 자신이 이용하고 싶은 사업소의 특징은 무엇인지, 서비스의 질은 어떠한지 등 일반 시민들이 사업소 내용을 파악해 서비스 이용 시 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사업소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말함.

- 都는 복지서비스 제3자 평가를 위해 이용자 조사와 사업 평가의 2가지 방식을 사용함. 이용자 조사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 및 서비스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의견청취, 현장관찰의 3가지 방식 중에서 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실시함. 사업 평가는 사업자의 자체 평가 및 방문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소의 조직 경영·관리 능력과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함. 2009년부터는 일부 서비스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음.
- 평가기관은 사업소가 작성한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자체 평가와 이용자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자와 사업자 간의 의견교환 과정을 거쳐 평가결과를 도출함. 사업자는 평가결과에 의문이 있을 경우 평가기관에 문의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점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토론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음. 평가결과를 사업자가 인정하게 되면 都 복지 포털 사이트인 ‘도쿄 복지 내비게이션’을 통해 사업소의 기본정보와 함께 공개함. 都는 평가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www.fukunavi.or.jp/fukunavi/hyoka/outline.htm)

(www.fukunavi.or.jp/fukunavi/hyoka/img/nagare.pdf)

(www.fukunavi.or.jp/fukunavi/hyoka/document/guideline.pdf)